

#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여수산단 숨통 트이니

고부가 산업 전환·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세제·재정 지원 등 근거 마련 지역 정치권 '환영'…김영록 지사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주민에 큰 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위기에 빠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부가 산업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등이 담겼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과 중동이 저가공세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여수산단 NCC 가동률은 70% 대로 내려 앉았다.

여수 석화산단은 전국 최대 나프타 생산지로 전국 생산량(1470만t)의 절반 가까운 626만t를 생산 중이다. 여수 산단 내 NCC 공장은 7곳으로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일찌감치 생산량 감축에 나선 상태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로 전남 대표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재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별법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썼다.

김 지사는 이는 기쁜 소식이라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등 동부권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업계의 바람이며 경쟁력 강화 핵심요소인 전기료 감면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수 석유화학산업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길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사업재편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대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중앙정부, 전남도,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수산단의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경실련 "지방의원 공약 기재 기준 강화해야"

광주일보 공약 추적단 보도 순기능

공약 공개와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11월3일·10일·11일·21일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의회에 공약 기재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광주경실련을 포함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공약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광주일보를 포함한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노력으로 일부 시·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개편의 움직임이 있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약 추적단이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선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선거관련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웠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한계와 선관위 관리 부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 감시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경실련 측은 풀이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공약집) 제출 의무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지방의원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를 보면 대부분 '슬로건' 구호)과 개발 공약 중심으로 쓰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는 탓에 지방의원의 공약에서 입법, 집행부 감시와 지역 현안 정책 대응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공보는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와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전자파일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공보 안에서 공약이 어느 대목인지 알아보기 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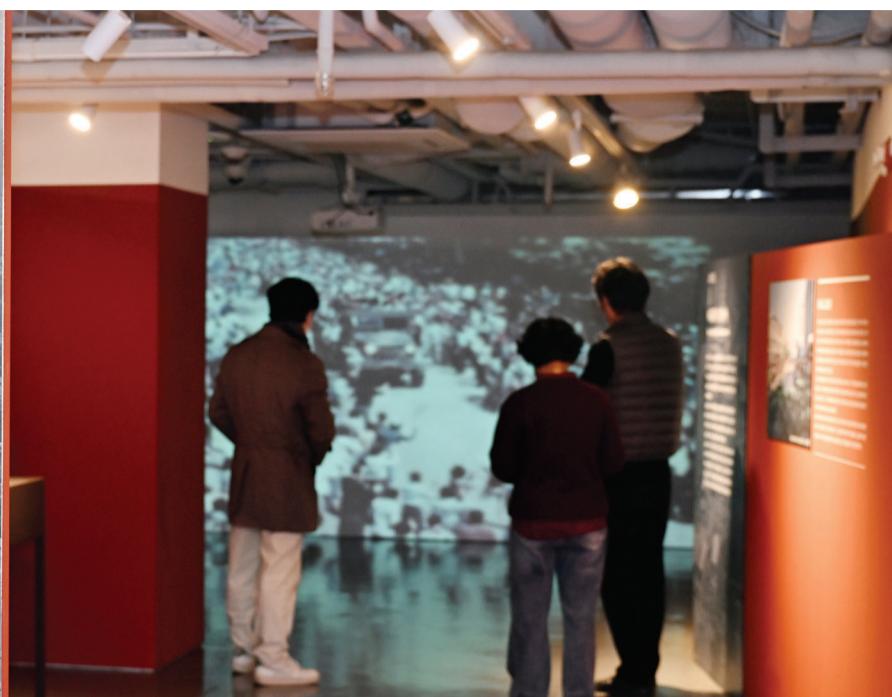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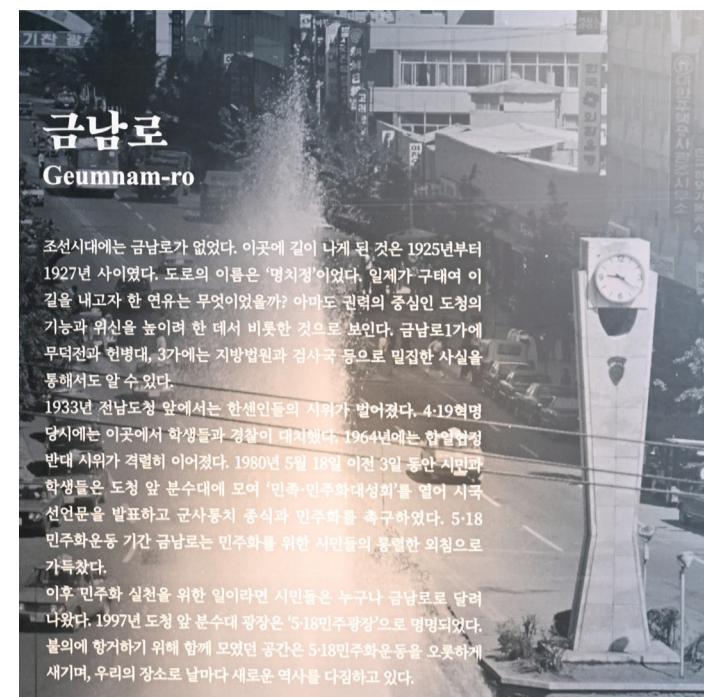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보 안에 입법 공약, 집행부 감시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약 계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선언적 공약이 낭비되는 문제

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약서 제출 의무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에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0주년 특별전

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5·18기록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나명주기자 mjna@

## 광주시 재정 '빨간불'…의무 경비 누락·소상공인 예산 삭감

재정자립도 33.88%…최근 5년 새 최저치 기록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의 자체사업 비중이 마지노선인 3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다.

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실이 내놓은 '2026년도 광주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안 규모는 7조 6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33.88%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고, 자체사업 비중은 29.14%로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내년에 갚아야 할 지방채 원금은 1978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자 부담도 4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이 사실상 2032년 이후로 밀리는 등 대형 현안 사업들도 차질을 빚고 있어 시정 운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단계 일부 공구는 재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필요한 시비 요청액 1587억원 중 실제 반영된 예산은 638억원(40%)에 불과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법정·의무 경비 편성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무적 경비 미편

성액은 총 4193억 4400만원에 달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502억 9400만원), 제2순환도로로 재정지원금(227억 7200만원)이 누락됐고,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200억 5300만원)도 예산서에서 빠졌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재원이 생기면 반영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필수 경비를 누락하는 조기 기편성은 예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1억 7800만원 삭감됐다.

민선 8기 핵심 조직인 신활력종합관 예산은 1억 1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98.1% 삭감됐고, 광주전략추진단 예산 역시 2억 5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식물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올해 최고 정책 '광주다음 통합돌봄'…의료 서비스 결합 호평

광주형 공공의료 2위

광주시민이 직접 볼은 올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한층 진화한 '광주다음 통합돌봄 시즌 3'가 선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정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광주를 빛낸 스마트정책 경진대회'에서 시민 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올해의 베스트 10 정책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관행적인 내부 위원 중심의 심사 방식에서 탈피했다.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설문과 시민의 날 현장 투표, 지역 리더 설문조사

등 9개월간의 대장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 총 1만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정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치열한 경합 끝에 1위는 '광주다음 통합돌봄 시즌 3'가 차지했다. 지난 2023년 시즌 1으로 대상을 받은 지 2년 만의 재등극이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정책은 기존의 생활 돌봄에 방문 간호와 구강 교육 등 의료 서비스를 더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어 통합건강센터 구축 등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한 '광주형 공공의료'가 2위에 올랐으며, AX 실증밸리 조성을 앞세운 'AI 중심도시 광주'가 3위

를 기록했다.

4위부터 10위에는 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 우치 공원 조성, 광천터미널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시원한 도시 프로젝트, 광주전 환경개선,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함께 진행된 산하 공공기관 정책 평가에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공동육아 나눔 정책인 '삼삼오오 이웃돌봄'이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의 'AI 관광 상품화'와 광주문화재단의 '광주문화누리카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